

아르헨티나

긴급경제조치 성공가능성 불투명

지난 3년 동안 지속된 경기침체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치·경제 혼란이 가중되었고, 지난 연말에는 급기야 경제난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시위와 약탈 등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태의 여파로 2001년 12월 20일 델라루아(de la Rúa) 대통령이 전격 사임하였다. 델라루아의 사임 이후 약 2주 동안 4명의 임시 대통령이 경제위기 수습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함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아르헨티나 의회는 두알데(Duhalde) 상원의원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4명의 임시 대통령들과 달리 비교적 잘 알려진 정치적 인물¹⁾인 두알데 대통령은 전임 델라루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03년 1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두알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치질서 회복, 내각 재편, 금융·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긴급경제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2년 1월 6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3년 12월 10일까지 시행될 동 법안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두알데 정부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 경감과 가격통제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하고 있다.

폐소貨 28.6% 평가절하 단행

지난 1월 6일 통과된 긴급경제법안 중 핵심 조치는 폐소貨의 평가절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는 1991년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었던 태환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새 정부는 수출입거래 및 금융거래에 대해 폐소貨를 28.6% 평가절하하여 공식환율을 달러당 1.4페소로 변경하였다. 동 법안에 의해 중앙은행은 폐소貨의 발행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정부의 공식환율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으

1) 메넴(Menem)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 있으며, 1999년 대선에서는 페론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델라루아 前대통령에 패배하였음.

며, 이에 따라 동국 정부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향후 3~4개월 동안 공식환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관광 등 민간거래의 경우에는 자유변동환율이 적용될 예정으로 있어, 아르헨티나는 당분간 이중환율제를 운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긴급경제법안에는 폐소貨 평가절하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평가절하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금융상품의 잔액, 집세 등을 자동적으로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이 법률로 금지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채무의 약 70%가 미 달러貨 표시 채무인 상황에서 평가절하로 야기될 채무불이행과 파산사태를 줄이기 위해, 주택대출, 개인대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10만 달러까지는 달러당 1페소의 환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가입된 미 달러貨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동결조치 해제 이후 인출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산인 달러 대출금에 대해서는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는 반면, 부채인 달러 예금에 대해서는 가치가 유지되는 등 아르헨티나의 은행들은 자산·부채간의 심각한 가치평가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완화 조치로 은행부문에 대한 상당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며, 두알데 정부는 은행부문 금융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석유수출액에 대한 20%의 신규 조세 부과와 다국적 금융기관의 지원자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 어려움 예상

폐소貨 평가절하 조치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소매상들이 평가절하 조치를 예상하고 미리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일부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동국 정부는 저소득층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 연료, 의약품, 전화료·전기·상수도 등 공공요금의 가격인상에 제한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전기·가스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경제법안에 의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과거 국영기업의 매각조건에 대해 재협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전기·가스 기업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경제법안에도 불구하고 외화대출금이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은 완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내수요의 부진으로 평가절하를 상쇄할 가격상승이나 매출증대 가능성이 낮아,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규모 채무부이행과 회사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해 11월 중 공적채무 재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던 은행들은 부실여신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계획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두알데 정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불안을 초래할 대중적인 반발이 발생한다면 두알데 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두알데 대통령이 실각하고 아르헨티나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IMF의 자금지원 불투명

두알데 정부가 긴급경제법안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끌어낸다 하더라도, 이의 성공에 필수적인 자금확보와 대외채무 재조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IMF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균형예산의 수립·시행이 선결과제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에 150억~20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IMF로부터 추가로 자금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199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과도한 외채차입을 막지 못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IMF는 자금지원의 실패를 더 이상 원치 않고 있으며,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자금지원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IMF는 2002년도의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공지출을 더욱 억제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

항의 이행은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매우 어려울 것이며, IMF와 아르헨티나 정부 사이에 논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가능한 빨리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해외채권자들과 채무재조정 협상을 개시하는 전제조건이 될 IMF의 지지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공적채무 관련 당사자의 수도 많아 채무재조정 협상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알데 대통령이 과거에도 모라토리엄과 대외채무 재조정을 주장한 바 있으며 아직 정통성과 대중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두알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외채무의 대폭적인 삭감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채권자들의 상당한 채무경감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가 공적 지불능력을 회복하고 경제회생을 이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李 漢 九】